

KWDI

해외통신

2019년 12월 2차 (2019.12.16 ~ 12.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왕립학술원, 데이터로 남성 편중 세상을 보여준 페미니즘 도서 'Invisible Women'에 과학도서상 수여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여성 인권활동가이자 작가인 케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Caroline Criado Perez)가 쓴 책이 영국의 굵직한 상 두 개를 휩쓸며 2019년을 대표하는 페미니즘 도서로 이름을 올렸다. 페레스의 두 번째 출간 도서인 '보이지 않는 여성들, 남성 중심 세상을 편중된 데이터로 고발하다(Invisible Women: Exposing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 이하 Invisible Women)'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남성 중심으로 설계됐는지 증명한다. 남성용 충격 흡수 인형만 사용해 제작한 차량용 에어백, 백인 남성이 기준인 암 연구 등 이 책은 우리를 둘러싼 일상에서 여성이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고발한다.

페레스는 2019년 9월 Invisible Women으로 영국 왕립학술원 과학도서상(Royal Society Science Books Prize)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 아카데미인 영국 왕립학술원(the Royal Society)에서 전 세계에 출판된 과학 도서 중 최고의 책에 시상하는 권위적인 상으로, 상금만 2만5천 파운드(우리 돈 약 3천800만 원)에 달한다. 페레스는 같이 후보에 오른 천문학자 존 그리빈, 의사 몬티 리만, 언론인 팀 스메들리, 물리학자 폴 스타인하트, 미국 코넬대 교수 스티븐 스트로가츠 등 쟁쟁한 남성 후보 5명을 물리치고 과학도서상을 차지했다.

페레스는 영국의 여성 운동단체인 The Women's Room의 공동 설립자로 영국 파운드 지폐에 여왕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인 점을 지적하며, 영국 은행(Bank of England)을 압박해 2017년 새로 발행된 10파운드 지폐에 영국 소설가 제인 오스틴을 넣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참고자료

- Caroline Criado Perez (2019.03.07), "Invisible women: Exposing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 Penguin Books.
- The Royal Society (2019.09.23.), "Caroline Criado Perez's ground-breaking gender bias exposé wins 2019 Royal Society Science Book Prize",
url: <https://royalsociety.org/news/2019/09/winner-2019-insight-investment-science-writing-prize/>
(검색일: 2019.12.23.).
- The Guardian (2019.02.23.), "The deadly truth about a world built for men - from stab vests to car crashes",
url: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2019/feb/23/truth-world-built-for-men-car-crashes>
(검색일: 2019.12.23.).
- Financial Times (2019.12.04.), "Exposé of data gender bias wins FT/McKinsey book prize",
url: <https://www.ft.com/content/6cc894a0-15e9-11ea-8d73-6303645ac406?fbclid=IwAR37kPkVYz7xl8eaM2w8vdZpOWz54ODWPvCcBkiF0wTNUWD CrAOgvM-7VPo>
(검색일: 2019.12.23.).

📌 Invisible Women이 다른 페미니즘 도서보다 돋보이는 이유는 남성 중심적인 세상을 데이터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는 사무실 평균 온도를 결정하는 공식을 적용할 때 일반 남성의 휴식 대사량(resting metabolic rate)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 네덜란드 연구진들은 사무직 성인 여성의 휴식 대사량은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남성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무실 온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공식이 여성의 휴식 대사량을 최대 35% 높게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고, 남성 편향적인 데이터 때문에 여름철 에어컨 온도가 ‘남성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름철 사무실에서 남성 동료들은 반소매를 입고 활보하지만, 여성들은 담요를 덮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이유다.

📌 의학 연구에서도 여성은 종종 배제된다. 영국에서 매년 8천여 명이 업무로 인한 암 진단을 받지만 대부분 연구가 남성 위주로 이뤄진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최근 50년간 산업 재해로 유방암 진단을 받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연구자들은 여성의 몸, 여성이 다수인 작업 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좀체 시행하지 않는다. 여성은 임신이나 생리로 호르몬 변화를 겪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연구가 더 복잡해진다. 대부분 암 연구가 몸무게 70kg의 25~30세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여성에게 적용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 남녀 화장실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한다. 보통 건물에서 남녀 화장실을 설계할 때 똑같은 면적으로 각각 설계되지만, 저자는 이 배분법이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겉으로 보면 평등해 보이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2.3배 더 길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 면적이 더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점, 가임기 여성이 생리 기간에는 탐폰이나 생리대를 교체할 위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임신 기간엔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페레스는 과학도서상 외에도 2019년 12월 4일, 영국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와 맥킨지 사(McKinsey & Company)가 선정한 올해의 비즈니스 도서(Business Book of the Year Award)로 선정돼 상금 3만 파운드(우리 돈 약 4천500만 원)를 거머쥐기도 했다.

핀란드 FINLAND



핀란드, 성 역할 구분과 남성 중심 조직문화로 남성의 육아참여 저조

곽 서 회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핀란드의 정부기관이자 사회보험 전담기관 Kela(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의 발표에 따르면 자녀를 둔 아버지인 남성 중 법적으로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남성은 약 9%에 그쳤다(2016년 기준). 반면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여성은 91%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Kela(2019),
“Parental allowances”,
url: <https://www.kela.fi/web/en/parental-allowances>
(검색일: 2019. 12. 8.).

핀란드의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로 인한 관련 수당은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핀란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54일이 주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은 비교적 높았는데, 자녀 출산 직후 약 69%의 남성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한다. 두 번째 자녀부터는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할 때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8일씩 연장된다. 즉 둘째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72일, 셋째 출산 시 90일, 넷째 및 그 이상의 경우 105일이 주어진다. 그리고 Kela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부성수당(paternal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158일 (근무일 기준)이 주어지며, 기간은 부부 또는 커플끼리 서로 협의하여 겹치지 않는 기간에 번갈아 사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Kela에서 육아수당(parental allowance)을 받는다.

2018년의 경우, 자녀를 둔 핀란드 남성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 약 36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인 여성이 직장에 복귀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가량에 해당하는 남성은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남성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몇 년간 계속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국립 보건복지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THL) 소속 요아나 나르비(Johanna Närvi) 연구원은 핀란드 내 저조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의 원인으로 성 역할(gender role), 즉 성별 역할 분담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르비 연구원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여성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제의 본질은 여성이 먼저 우선적으로 육아를 맡고 그것이 쪽 이어지면서 결국 여성은 경력이 단절되고 집에서 계속 육아를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에서는 출산휴가를 쓰는 직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남성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썼을 때 단기간 대체할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남성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가 다른 동료들에게 분산되거나 아예 방치 되어 버리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한다. 나르비 연구원은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직원 한 명 당 맡는 과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경우 한 명만 공석이 되어도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여성 직원의 출산휴가 모두를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남성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기반 정유기업 네스테(Neste)의 부사장인 하넬레 야코수-얀손(Hannele Jakosuo-Jansson)은 한 언론과의 이메일 서신을 통해 네스테는 남성,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직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이행 정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핀란드 기반 글로벌 기업인 코네(Kone)에서는 그동안 약 200여명의 남성 직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인사팀 디렉터는 최근 몇 년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남성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히기도 했다.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of Finland(2019),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url: <https://tem.fi/en/maternity-paternity-and-parental-leave> (검색일: 2019. 12. 8.).
- Yle(2019.11.10.), "Report: Dads still slow to take advantage of paternity leave", url: https://yle.fi/uutiset/osasto/news/report_dads_still_slow_to_take_advantage_of_paternity_leave/11061403 (검색일: 2019. 12. 8.).



핀란드,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 탄생과 새로운 내각 내 여성 진출 두각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핀란드에서는 2019년 12월 초, 의회 투표를 통해 현재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소속 산나 마린(Sanna Marin) 의원이 새 총리로 임명되었다. 총 200석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이번 투표는 찬성 99표, 반대 70표를 기록했다. 핀란드에서 여성 총리로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핀란드는 유럽 내 최초로 1906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이어 1907년 의회 투표권을 부여한 국가이기도 하다.
- 산나 마린 총리는 올해 34세로,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 셈이다. 산나 마린 총리는 20대 초반부터 정당에 입문하여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2012년은 27세의 나이에 그녀의 고향인 탐페레(Tampere)에서 시의회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 사회민주당 의원으로 의회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는 교통-커뮤니케이션 장관(Minister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직을 역임하고 있었다.
- 마린 총리는 사회민주당 내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을 당시 핀란드 주요 언론인 Yle를 통해 “내 나이나 여자라는 성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보다도 내가 정치에서 다뤄야 할 이슈들, 그리고 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우리에게 신임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한다”고 밝혔다.
- 마린 총리는 임명 직후 내각 인사를 발표했는데, 19개 부처 중 12개 부처 장관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대내외로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 핀란드 내 주요정당 5개 중 4개는 여성이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 3명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젊은 편이며, 30대 초반의 여성이다.
- 산나 마린 총리는 젊은 세대답게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고, 복지 및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유복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다 어머니와 여성파트너가 함께 하는 동성부모 가정(rainbow family)에서 성장했다는 배경이 소외계층, 복지정책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개인적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녀는 임명 이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서 “핀란드에서 모든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 핀란드의 투르쿠 대학(Turku University) 산하 의회연구센터(Centre for Parliamentary Studies) 소속 정치학자인 예니 카리마키(Jenni Karimäki)는 로이터(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새 정부 구성에 대해 “이전에 비해 의회 내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지난 4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했고 이번 새 정부의 모습이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보다 많은 여성의 의회진출 및 주요 직책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AP(2019.12.10.), “Finland gets world’s youngest prime minister, a woman age 34,” <https://apnews.com/e2f28f889333a73a06b54bfa3e2e81e3> (검색일: 2019.12.23.).
- BBC(2019.12.09.), “Finnish minister Sanna Marin, 34, to become world’s youngest PM,”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0709422> (검색일: 2019.12.23.).
- Euronews (2019.12.09.), “Finland picks world’s youngest PM to head women-led cabinet,” <https://www.euronews.com/2019/12/09/finland-picks-worlds-youngest-pm-to-head-women-led-cabinet> (검색일: 2019.12.23.).
- Yle news(2019.12.11), “Familiar faces in Finland’s new government,” https://yle.fi/uutiset/osasto/news/familiar_faces_in_finlands_new_government/11111804 (검색일: 2019.12.23.).

여성 총리가 탄생하고 내각 내 주요 보직에 대다수가 여성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 핀란드 사회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슈는 이와 또 다른 이야기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총리 및 장관만으로 여성의 민간기업 또는 공직 내 의사 결정직 진출이 매우 활발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산나 마린 총리와 여성 장관들이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관련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 GERMANY



독일정부, 혐오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발표에도 젠더관점 미비 비난 이어져

채혜원 독일통신원

- 최근 독일에서는 혐오 표현(Hate Speech)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의는 지난 10월 독일 작센안할트주에 위치한 도시 '할레'에서 벌어진 인종차별·안티 페미니즘 테러와 녹색당 여성 정치인인 레나테 퀴나스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벌어진 혐오 표현에서 비롯됐다.
- 레나테 퀴나스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여성 혐오와 심한 욕설, 성폭력과 성희롱 댓글로 모욕을 당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그러나 레나테 의원에게 대한 혐오 표현 글을 두고 베를린 지방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표현의 자유와 혐오 범죄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 레나테 의원 변호팀은 "레나테 의원이 이미 여러 번 모욕을 당했듯이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성폭력과 성희롱, 강간 위협 등에 노출되고 있는 여성이 늘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레나테 의원 역시 독일 언론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혐오 범죄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며 "법원이 우익 극단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 이후 정치계와 법조계에서는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해 젠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함부르크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 및 디지털 폭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자리에는 여러 정치인과 법조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알무트(사회민주당) 의원은 "함부르크 시의회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혐오 표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rehm Verlag(2019.11.05.), "Hate Speech und digitale Gewalt gegen Frauen", url: <https://www.rehm-verlag.de/Gleichstellungsrecht/aktuelle-beitraege-zum-gleichstellungsrecht/hate-speech-und-digitale-gewalt-gegen-frauen/> (최종검색일 : 2019.12.26.).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10.30.), "Gegen Rechtsextremismus und Hasskriminalität", url: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egen-rechtsextremismus-und-hasskriminalitaet/140518> (최종검색일 : 2019.12.26.).
- Spiegel Politik(2019.09.27.), "Anzeige gegen Berliner Richter wegen umstrittenen Künast-Urteils", url: <https://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renate-kuenast-beleidigungen-auf-facebook-kanzlei-geht-gegen-berliner-landgericht-vor-a-1288961.html> (최종검색일 : 2019.12.26.).

- 현재 연방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혐오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무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모여 우익극단주의와 혐오 범죄에 맞서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채택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살펴보면 ▲인터넷상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에 혐오표현 가해자 정보 요청 권한 부여, ▲폭력 및 혐오 범죄와 관련된 형법 조항 보완 및 확장, ▲우익 극단주의, 반(反)유대주의, 인종 차별주의와 관련한 예방 프로그램 확대, ▲무기 및 폭발물에 대한 법안 및 규정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독일여성법조인협회는 여성 혐오와 안티-페미니즘에 대한 대처가 빠져있는 점을 비판했다. 독일여성법조인협회는 오래전부터 인터넷 내 혐오 표현에 대응하고 이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특히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젠더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독일 언론 ‘슈피겔’과의 인터뷰를 통해 혐오 표현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우익극단주의,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 외에도 수많은 가해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여성법조인협회는 현재 인터넷 혐오 표현이 ‘안티-페미니즘’, ‘성차별’, ‘인종 차별주의’ 등 크게 3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형태의 혐오 표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를 이끌고 있는 마리아 교수는 “여성은 인터넷상에서 남성보다 혐오 표현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고 있으며, 여러 차례 모욕을 당하고 있는 레나테 녹색당 의원의 사례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여성들은 인터넷상에서 심각한 성희롱과 성차별, 강간 위협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에 대한 공격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연방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성적 모욕과 강간 위협 등 인터넷의 혐오표현이 특히 여성을 겨냥해왔으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혐오를 양산해내고 이용자를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독일 연방정부의 혐오 표현에 대한 조치가 여성 혐오 범죄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여성건강 전문가들, “집 근처 여성 전용 원스톱 클리닉 필요” 주장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의 여성건강 전문가 집단은 시내 중심가에 피임과 낙태, 여성 질환 검사, 폐경 상담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클리닉 (one-stop clinic)’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후 피임약(morning-after pill)도 의료진과 상담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영국 여성 의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 영국 왕립산부인과 전문대학(The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은 2019년 12월 2일 영국 하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Better For Women’을 발표했다. 90년 역사를 지닌 여성건강 연구 단체인 왕립산부인과 전문대학은 이 보고서를 통해 상담 종류에 따라 여러 병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현 NHS(국민건강서비스)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여성 친화적인 서비스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그 핵심이 바로 ‘원스톱 클리닉’이다. 정부가 직장과 육아 등으로 바쁜 여성들이 ‘병원 투어’를 하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집과 가까운 클리닉 한 곳에서 피임과 낙태, 여성 질환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왕립산부인과 전문대학이 올해 8월 영국 18~65세 사이 여성 3천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7%가 집 근처에서 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0%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낙태 상담과 시술 등을 받지 못한다고 답해 지역 기반의 여성 전용 의료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고서는 “원스톱 클리닉은 주말이나 정상 진료 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립 산부인과 전문대학 회장인 레슬리 레이건은 “자궁경부암 검사(smear test), 피임, 성병 검사(STI check)는 의사 한 명이 15분이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의료진이 이 모든 검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현 의료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 이외에도 왕립산부인과 전문대학은 보고서를 통해 여성들이 피임과 낙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은 여성이 원할 때 하는 것’이라는 왕립산부인과 전문대학의 원칙 때문이다. 이 단체는 영국 전체 임신의 45% 정도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고 추산한다.

📌 그 방법으로, 영국 보건복지부가 낙태법(Abortion Act 1967)을 재검토해 임신 중단 약물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집 외에 다른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프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약물이다. 낙태법에 따르면, 영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은 ‘집(home)’에서만 복용할 수 있는데, 집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여성들이 주소지로 등록된 집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구 사후 피임약을 의료진과 상담하지 않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등장했다. 보고서는 “경구 사후 피임약(oral contraceptive pill, OCP)은 전 세계적으로 60년 넘게 가장 많이 연구된 약물이지만 영국에서는 의료진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처방전이 있어야만 피임약을 얻을 수 있는 현 제도가 피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The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2019.12.02.), “Better for Women (full report) Improv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girls and women”, url: <https://www.rcog.org.uk/globalassets/documents/news/campaigns-and-opinions/better-for-women/better-for-women-full-report.pdf> (검색일: 2019.12.12.).
- The Gaurdian(2019.12.02.), “One-stop shops needed for women’s health services”, url: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dec/02/one-stop-shops-needed-for-womens-health-services> (검색일: 2019.12.12.).



캐나다, 양심적 진료 거부 보호 법안 논쟁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 알버타(Alberta) 주에서 양심의 권리 보호법(Conscience Right Protection Act, Bill 207)이 지난 11월 발의된 이후 캐나다 전역에 걸쳐 논쟁의 불을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환자가 요구하는 치료를 의사 자신의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심의 권리 보호법은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기관이 의료진에게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거나, 관련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알버타주의 인권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양심을 고용상의 차별 근거 금지 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적시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되어 두 가지 젠더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첫째, 이 법안이 여성의 낙태에 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단 윌리엄 알버타 의원(United Conservative Party MLA Dan Williams)은 낙태 반대주의자(Pro-life)로 잘 알려져 있어 이 법안이 윌리엄 의원과 같은 낙태 반대주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온타리오(Ontario) 주에서 몇몇 의사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강제하는 주의 법률이 인권 침해적이라며 제시한 소송에서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의사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반하더라도 최소한 반드시 다른 의사에게 추천을 해 줄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 판례가 나왔는데, 윌리엄 의원은 이 판례를 개인의 양심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 양심적 의료 서비스 제공 거부의 권리는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 밝혔다.

두 번째 논쟁은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인(trans people)에 대한 것으로 이 법안이 트랜스인들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버타를 포함한 캐나다 많은 주의 현행법은 의사의 개인적 신념이 환자가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와 충돌할 경우, 해당 의사가 반드시 다른 의료진에게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의사가 양심에 반하는 특정 서비스를 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이를 근거로 의사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법의 추천 의무 규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트랜스 인권 옹호 단체들은 대대적으로 이 법안을 공격하며 국가가 트랜스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신념을 가지고 트랜스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캐나다의 많은 주에서는 트랜스인들에 대한 젠더 확증 수술(gender affirming surgery)을 공공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의학 전문의로부터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면 1차 의료시설에서부터 트랜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신념을 가진 의료인들이 전문의에게 트랜스인들을 추천해 주지 않거나, 혹은 진단을 해 주지 않을 의사에게 연결해 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트랜스인들의 장기간 호르몬 요법에의 접근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anada(2019.12.16.),
“Minister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Canada Mandate Letter”,
url: <https://pm.gc.ca/en/mandate-letters/minister-justice-and-attorney-general-canada-mandate-letter>
(접속일 : 2019.12.20.).
- CBC(2019.11.22.),
“Controversial conscience rights bill for Alberta physicians voted down”,
url: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conscience-rights-alberta-doctors-1.5369332>
(접속일 : 2019.12.20.).
- Grandin Media(2019.12.03.),
“Debate over conscience rights hasn't cooled off in Alberta”,
url: <https://grandinmedia.ca/debate-over-conscience-rights-hasnt-cooled-off-in-alberta/>
(접속일 : 2019.12.20.).
- CBC(2019.11.10.),
“Advocates concerned Alberta conscience rights bill could put trans people at risk”,
url: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advocates-say-conscience-rights-bill-207-1.5354803>
(접속일 : 2019.12.20.).

이 법안은 2019년 11월에 발의된 후 상임위 1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대대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혔고, 2차 심사에서 부결되어 알버타 주의회 본안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과 보수 종교계 등의 지지를 얻은 윌리엄 의원은 해당 법안의 상정을 새해에 다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트뤼도 수상은 12월 16일 법무부에 보낸 업무 서한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형법을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캐나다 언론은 대체로 트뤼도 수상의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 보호 행보와 시민사회 및 의료계의 반대, 알버타 주지사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어렵다고 보고 있다.